

국제질서의 개편과 전략적 선택

- 3 <권두논문>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7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유영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18 통일 대비 대북 심리전
고성윤 (前 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유영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아의 크림 합병 결정 이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13년 12월 유로마이단 혁명이 발발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탈냉전 이후 구축된 국제질서를 뒤흔들만한 요인으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와 미국 및 서방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크림을 합병하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2000년 들어 가장 중요한 국제문제로 부상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친러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리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로 인한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과 대응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가 현재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으나, 러시아 역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가 굳이 미국 및 서방과의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까지 우크라이나 문제를 악화시키기에는 자국의 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통일 대비 대북 심리전

고성윤 (前 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

김정일 사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들어 북한군의 도발이 잦아지고 심리전 차원의 '공갈협박'도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 7월 14일 사격도발에는 해안포와 방사포 100여 발을 포함 총 200여 발의 포, 로켓, 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단거리 무기가 동원되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은 일련의 사격이 점점 휴전선 가까이로 발사지점을 옮기고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주 표적 대상으로 삼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무차별 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체제로 권력 상층부의 안정은 확보하였을지 모르나, 민심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더욱이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 한중관계로 김정은의 심기는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일·러와 관계를 넓히고 있으나 실속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핵 무장화와 잦은 대남 도발에 더욱 목을 매는 이유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땅한 방안을 찾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필자는 우리가 취할 대북 심리전의 큰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중·단기적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연착륙(soft landing)'시켜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남북 통합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답을 찾고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대북 심리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 안 하고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동북아(東北亞) 안정을 위하여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도 국제공조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음을 심리전 메시지에 담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권두논문〉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화

2014년 초 전 지구촌의 최대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2004년 오렌지 혁명 여파와 대내 정치 투쟁, 동서 간 지역 갈등, 포퓰리즘적 정책 추진과 경제침체 등 우크라이나 대내 요소가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특수한 관계도 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으로 인한 미국·서방 측과 러시아 간 견제와 경쟁, 대립적 요소도 담겨져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정치경제 질서 재편이 이뤄지고 있고, 2012년 푸틴 집권 3기 이후 미·러 간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어, 향후 전도를 가늠하기 힘든 측면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된 직접적인 도화선은 2013년 11월 21일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와 FTA 협상을 중단한데서 비롯되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에 대한 항의로 키예프 유럽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된 것이다. 한 달 뒤쯤인 12월 17일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스공급가 30% 할인, 150억 달러 우크라이나 국채 매입, 무역 분쟁 해소 등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도 하였으나, 대내 정세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2014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우크라이나 의회가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하고 투르치노프 권한대행 체제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급기야 3월 1일에는 러시아 무장병력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거하면서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되었으며, 3월 6일에는 크림자치공화국 의회가 러시아로의 합병을 결의하고 이에 대한 주민투표를 3월 16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태 전개 과정 속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전화통화를 비롯해 주요국 정상들이 해법을 찾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우크라이나 임시정부의 반발 및 서방 측의 對러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유럽 지역

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향배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요 행위자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이제는 푸틴의 러시아, 오바마의 미국, 올랑드의 프랑스, 메르켈의 독일, UN, NATO, EU 등 중·동유럽국가 모두가 관여하게 됨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화’된 모습을 띠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

국제관계의 시각 속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음과 같은 국제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첫째, 탈소비에트 시기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전환과 그 이후의 민주화과정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1989년 동유럽 민주혁명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체제 전환과 더불어 발틱 3국은 물론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이 EU와 NATO에 가입하면서 친서방화되었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 중 탈러시아를 모색하고 있는 국가들은 조지아 사례에서 보듯 러시아와 갈등과 분쟁을 겪었다. 우크라이나 역시 2004년 오렌지 혁명을 통해 친서방 정권이 출범한 바 있고, 오렌지 혁명이 서방의 사주하에 이뤄졌다고 믿는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의 EU 또는 서방권에의 편입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1991년 소연방 붕괴 이후 이에 따른 체제 전환과 민주화 과정의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전략적 완충국가(buffer state)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중·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지정학적으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와 러시아 간 완충국가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 유럽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핵심통로지로서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 탈냉전 이후 동유럽 국제질서의 재편의 연장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냉전 시기 국제질서는 3차례에 걸쳐 변화되었다. 하나는 1989년 동유럽과 1991년 소연방의 붕괴에 따른 미국 일극질서의 창출이었으며, 두 번째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개된 ‘테러전 시대’였다. 현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패권의 쇠락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G2체제의 가시화로 대표된다. 이러한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 속에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면서 미국·서방과 대조되는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함께 이뤄진 G2체제의 형성 속에서 러시아는 유럽권에서 추진되어온 질서 재편 움직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탈냉전 이후 유럽질서는 NATO의 동진과 EU의 확대, 유럽 MD의 구축으로 대표된다. NATO와 EU의 동진 추세하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마지노선에 해당된다. 우크라이나의 향배에 따라 동유럽 질서 재편의 그림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넷째, 주요국 간 ‘핵심이익(vital interest)’이 연계된 사안이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측과 러시아 모두에게 있어 우크라이나는 핵심이익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소연방 구성공화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측면에서도 떼어낼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1954년 흐루시초프가 크립반도를 우크라이나에 귀속하도록 한 조치도 사회주의형제국으로 자연스러운 동질감의 표현이 담긴 것이지, 국가 간 영토분할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푸틴 정부가 2013년 2월 성안한 ‘대외정책개념’ 문서에서도 최고의 정책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상이 독립국가연합(CIS)이며, 핵심에 우크라이나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탈냉전 국제질서 재편과정 속에 과연 주요국의 핵심이익이 담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어 나갈 것인지 향배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미·러 간 군사적 대치, 분쟁 아니면 중재를 통한 외교적 타협과 협상을 이끌어 낼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이는 미래에 나타날지 모를 주요국 ‘핵심이익’과 연계된 사안의 해법을 제시해 주는 새로운 전형을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미·러 대외정책과 리더십 문제로 ‘부활한 러시아’와 푸틴-오바마 간 글로벌 주도권을 둘러싼 리더십 갈등과 충돌이 담겨져 있다. 2012년 5월 푸틴 정부 출범 이후 미러관계는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띠어왔다. 즉 미러관계는 푸틴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에드워드 스노든의 임시망명 허용, 유럽 MD 구축, 미국의 러시아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갈등 양상이 크게 증폭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주관하는 워싱턴 G8 정상회의와 시카고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함으로써 미국에 불만족한 입장을 나타내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와 소치 동계올림픽에 불참하는 등 양국 지도자 간 갈등과 신뢰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비록 오바마와 푸틴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각자의 주장과 이견 대립을 지속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는 푸틴과 오바마 대통령 간 리더십 갈등 내지 개인

적 감정, 친교 상태에 따른 양국관계 갈등 상황이 적지 않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미래 지구촌 질서를 둘러싼 국제표준(규범)의 설정과 해석의 대결이라는 다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 측 그리고 러시아는 각자 ‘국제법 준수’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각자 해석하는 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크림반도에의 무장병력 진입에 대한 국제법적 적법성 여부, 우크라이나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통성 인정 여부 등이다. 국제적 명분 쌓기와 국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셈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사점과 교훈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정학적으로 해양과 대륙의 가교국가이자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한반도에도 값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주위에 강대국이 포진한 국제환경 속에서 대내적으로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통한 역량 축적과 발전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리고 보다 큰 시각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전략적 사고와 능력의 중요함도 새겨야 할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래 교훈점을 깨닫고, 앞으로 한국의 바람직한 국가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와 기여 등을 포함한 큰 틀의 국가전략 대강이 수립되고 잘 발휘되길 기대해 본다.

❖ 저자 약력

■ 서동주

現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함.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 정치·외교, 한러/북러 관계, 동아시아국제정치 등이며, 최근 연구로 “러시아 푸틴시기 정치체제 특징”, “푸틴 집권 3기 대외정책 전망과 對러 대응전략”, “남-북-러 경제협력과 북러관계” 등이 있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유영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유로마이단 혁명의 배경과 함의
2. 러시아의 크림 합병
3.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정세 변화에 미치는 영향
4.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향후 전망
5.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유로마이단 혁명의 배경과 함의

가. 야누코비치 정권, EU와 협력협정 체결 잠정 중단 발표 이후 친러시아 정책 강화

- 2013년 11월 21일 야누코비치 정권은 EU와의 경제 협력과 지원을 위한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
- 2013년 12월 17일 푸틴-야누코비치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가스 가격 30% 인하와 15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국채를 러시아 국부펀드로 매입하는 대규모 경제 지원 정책 발표
 -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EU와의 경제협정을 맺을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거대 식량 기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
- ※ 러시아의 경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내 친서방 세력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본격화

나. 야누코비치 정권 출범 이후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 야누코비치 정권은 집권 이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대한 통제력 강화
 - 삼권분립 정신에 중대한 훼손이 있었으며, 2006년 헌법 개정 이후 강력한 위상을 정립하였던 의회와 내각의 영향력 축소 현상 발생
 - * 2012년 Freedom House는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수준을 ‘자유로운(Free)’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Partly Free)’로 하향 조정
 - 비판적 언론 매체와 반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검열 작업 강화
- 2014년 1월 16일 여당(지역당)은 일방적으로 시위에 대한 규제 강화법을 통과시키면서 반정부 시위대의 시위도 격화되는 현상 야기
- 2014년 2월 시위대와 경찰 간 유혈 충돌로 70~100명 사망하였고, 21

러시아에 있어

우크라이나는

안보 면에서

핵심 국가 중의 국가.

러시아는

‘군사독트린’ 등

공식 국가 문서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구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며,

나토 가입 저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

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하였고 야누코비치는 도주함으로써 유로마이단 혁명 완성

다. 뿌리 깊은 우크라이나 내 동서(東西) 간 지역 갈등

- 우크라이나 동쪽은 러시아계를 포함한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며, 서쪽은 러시아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친서방 세력이 다수를 차지
 - 우크라이나 내 민족 구성: 우크라이나인 77.8%, 러시아계: 17.3%, 타타르인 등 소수민족 4.9%
- 제정 러시아로부터 소련 시절까지 사실상 러시아의 통치를 경험하였던 우크라이나는 같은 슬라브 족이라는 점과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인의 반러 정서는 상당히 강한 편
- 야누코비치는 내각 및 주요 국가 기관에 자신의 출신지역 인사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서부 지역 주민들의 반감을 유도

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

- 러시아에 있어 우크라이나는 안보 면에서 핵심 국가 중의 국가
 - 소비에트 연방 출범 시 레닌은 “우크라이나 없는 소비에트 연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며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
 -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에 러시아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독립 당시 흑해함대 분할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있었으나 야누코비치 집권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2042년까지 장기 임대 계약 성공
 - * 크림반도 내 흐바르디스케 및 카차에도 러시아 공군기지 유지
- ※ 만약 러시아가 세바스토폴 흑해함대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러시아는 북해 바렌츠 해로부터 남쪽 국경까지 지중해 및 대서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모든 해로가 차단됨
-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그루지야와 몰도바의 나토 가입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상실로 귀결
 - 러시아는 ‘군사독트린’ 등 공식 국가 문서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구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며, 나토 가입 저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
 - 유럽지역에 위치한 구소련 공화국들이 나토에 가입하고, 미국의 MD기지가 건설될 경우 체코 및 폴란드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MD기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러시아의 타격이 예상됨

마. 탈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한계

- 역사적 유산으로 인한 한계
 -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이 동부에 이주하면서 일정 정도 세력을 형성
 -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 정권 시대에 친우크라이나 정책을 수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고학력, 인텔리 계층이 대거 러시아에 이주하면서 친 러시아 세력을 형성
- 경제적 종속
 - 현재 우크라이나의 총부채는 약 73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300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채권을 러시아가 보유
 - 우크라이나는 석유 15%, 가스 25% 정도만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러시아로부터 도입
 - 친러시아계를 표방하는 동부지역의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서부 지역은 농업에 크게 의존
 - 동부에 위치한 도네츠크주는 우크라이나의 전체 세금의 1/4을 납부
- 러시아의 의지
 - 우크라이나는 안보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국가로서 러시아는 결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상실을 묵과할 수 없는 입장

*러시아의 의지:
우크라이나는 안보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국가로서
러시아는 결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상실을
묵과할 수 없는 입장*

2. 러시아의 크림 합병

가. 푸틴 대통령 크림 합병을 최종 승인

-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비준한 러시아의 크림 합병에 대한 비준을 푸틴 대통령이 최종 승인(2014.3.18)
- 푸틴 대통령의 최종 승인으로 인해 크림반도와 흑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세바스토폴시는 사실상 러시아로 귀속
- 러시아는 크림 합병에 대해 크림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억압도 없었으며,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

러시아 정부가**크림반도 합병을****신속히 결정한 것은****러시아가 자국의****안보 이익에 대해서는****결코 타협을 하지 않을****것이라는 강력한****의지의 표출이****필요했기 때문임**

- 러시아 정부의 신속한 크림 합병에 대해 러시아 언론들은 ‘미국과 서방이 크림 합병을 러시아가 단순히 협상카드로 연계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의 전격적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 고조 (Rossiskaya Gazeta, 2014.3.19)

-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림 합병 이후 80%를 상회하는 가운데 일단 러시아 국내정치 카드로는 유효하게 작용

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배경

- 러시아는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고유 영토이며, 흐루시초프에 의해 우크라이나에 귀속된 것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으로 존재하던 것과 소연방 해체 이후는 상황이 다르다는 논리

- 크림공화국의 주민 투표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

- 러시아는 코소보 독립을 예로 들면서 코소보 주민들만의 투표로 독립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과 크림 독립을 위한 주민 투표를 동일하다고 인식

- 러시아 정부가 크림반도 합병을 신속히 결정한 것은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 이익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 필요했기 때문임

- 러시아 국가 공식 문건에 구소련권 지역은 러시아 안보에 대해 사할적인 지역으로 천명하고, 이 지역이 적으로부터 피침당했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

- ☞ 러시아는 그루지야 사태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서방이 예상하지 못했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안보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다른 구소련권 국가들에게도 경종

다. 러시아의 기습적 합병에 대한 미국 및 서방의 입장

- 미국 및 서방의 지도자들은 가히 전격적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의 크림 합병에 대해 사실 크게 허를 찔린듯한 상황

-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학자들 역시 러시아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 발생

- 미국 및 서방은 크림 주민 투표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모두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 경고
-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해 수위 및 효과 등에 대해 고심
 - 러시아를 제재할 경우 ‘부메랑 효과’에 의해 러시아의 보복 조치와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

라. 미국 및 EU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평가

- 결정적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서방국가들의 제재는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
-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EU의 제재는 러시아의 핵심 정치·경제인 및 기업으로까지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제재 효과는 미흡하다는 평가 우세
 - 미국과 EU의 제재에 대해 러시아 정부 및 제재 대상자들의 반응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 미국 내 언론 역시 “slap on the wrist(솜방망이)” 수준의 미봉책이라고 평가
- G7,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를 담은 ‘헤이그 선언’ 채택
 - 핵안보 정상회담 기간 중 미국의 제의에 의해 러시아를 제외한 G7 정상은 러시아를 G8 정상회담에서 당분간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사실상 소치 G8 정상회담을 거부
 - 러시아가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에너지, 금융, 국방 등 러시아 경제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제재 합의
- ☞ 미국과 EU의 제재는 현재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러시아 역시 초기 제재에 대해서는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

미국과 EU의 제재는 현재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러시아 역시 초기 제재에 대해서는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

3.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정세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 크림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리 독립운동 내전으로 비화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리주의자들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 유혈사태 격화
- 5월 25일 대선에 의해 포로셴코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나, 내전은 오히려 격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미국이 경쟁국이라고**규정하고 있는****중국조차도 미국과의****직접적인 대결을****피하고 있는 상황에서****러시아의 크림 합병은****탈냉전 이후 초유의****상황**

- 미국과 서방은 동부지역 유혈사태에 대해 무기 제공 등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러시아의 자제를 촉구
 - 러시아는 동부지역 유혈사태에 개입을 부인

나. 미국 일극주의의 약화

- 탈냉전 이후 미국의 일극주의에 대한 첫 도전
 - 미국이 경쟁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탈냉전 이후 초유의 상황
- 지역 강국들의 배타적 영향력 확인
 - 중국, 러시아가 자국의 배타적 영향력을 인정받기 원하는 지역에서 국제사회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할 경우 대응책 미흡
- 중남미 지역 좌파정권의 영향력 확대 도모 가능성
 -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던 중남미 국가들 중 미국의 지도력 약화를 계기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원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단결 가능성 고조

다. 동구지역에서 러시아 영향력 증대

- 구소련권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
 - 구소련권 국가 중 탈러시아를 원하던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등은 조심스럽게 정책 검토 가능성
 - 중도 노선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절감하고 친러 방향으로 정책 조정 가능성 전망
-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연합(EEU) 확대 가능성
 -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가입하고 있는 경제 연합체인 EEU에 중도 성향의 국가들의 가입 가능성 증대

유라시아연합(EEU): 2011년 10월 당시 푸틴 총리에 의해 제안된 구소련권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 다극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러시아의 포석이며, 2015년까지 단일 화폐 도입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구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 증대 가능성
 -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구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

해야 한다고 주장(Rossiskaya Gazeta, 2014.3.20)

- 경제적 영향력 증대뿐 아니라 안보적 영향력 증대에도 러시아는 관심을 가지며, 체코, 폴란드에 MD 기지 건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

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인한 국제 현안 문제 해결 지연

- 이란 핵문제 및 시리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가 서방과의 대립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 예상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란 핵협상을 우리 명분 쌓기에 이용할 뜻은 없지만 미국과 EU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면 여기서도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NYT, 2014.3.20)
 - 시리아 문제에 있어 러시아는 알 아사드 정권을 계속 지지하고 있어 문제 해결 난망
- New START 협정 폐기 우려
 -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할 경우 New START 협정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 ‘핵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오바마 정권에 타격 예상

New START 협정: 1991년 START(전략무기 감축협정)가 미소 간에 타결되고 2010년 미러 간 체결된 새로운 포괄 핵무기 감축협정. 협정에 의하면 2018년까지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기 이하로 감축

-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협조 가능성 하락
 - 실리적 차원에서 한반도 정책 변화를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던 러시아가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할 가능성 농후

*실리적 차원에서
한반도 정책 변화를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던 러시아가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할
가능성 농후*

4.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향후 전망

가. 미국 및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 미국은 러시아에 군사적 제재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이상 강압적 외교 수단으로는 경제제재 이외 대안이 없는 상태
- 미국이 이란 제재에 활용하였던 금융제재를 러시아에 대입하기에는 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는
유럽지역에 보다
공세적인 군사정책
수행 가능성 증대.
우크라이나 신정부에
대해 가스비 인상,
동부 지역 문제 등을
놓고 압박 가속**

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 자국 은행 및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과 은행들로 하여금 러시아와의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도록 완벽하게 강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금융제재 지지자들 중 강경파는 러시아의 국제적 불법 금융활동을 고발, 중단시키기 위해 화폐 위조, 부패, 탈세, 조직적 폭력 등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점도 상존
 -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세계적 캠페인은 전 세계 국가들의 협조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제대로 작동시켜 효과를 보려면 절대적 시간이 필요
 - * 제재국들의 위험도도 높으며 러시아의 보복도 고려
- 미국의 제재 강도와 범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EU가 미국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EU의 제재 수준이 낮을 경우 러시아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 유지 노력

-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는 유럽지역에 보다 공세적인 군사정책 수행 가능성 증대
 - 2007년 러시아는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협정(CFE)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데 이어 2013년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M’ 중거리 미사일 배치 추정

이스칸데르-M 전술 미사일: 사정거리는 500km이며, 미사일 방어망과 대공 방어망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초음속 미사일. 가장 큰 특징은 비행 궤적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임.

- 우크라이나 신정부에 대해 가스비 인상, 동부 지역 문제 등을 놓고 압박 가속
 - 러시아는 현재 친서방적인 우크라이나 신정부가 러시아와 반목하는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으며, 신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서방과 협상
 - 러시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세력을 지렛대 (leverage)로 활용 가능성 농후

다. 미국 및 서방의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

- 러시아의 경제침체 가능성
 - 미국 및 EU의 경제제재가 실현될 경우 성장 동력의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불안요인으로 작용
 - * 외국 자본의 급속한 이탈 및 국제 신용 평가 하락
- 국가목표 달성 난망
 - 러시아 경제의 침체는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서의 목표 수정을 야기할 가능성 농후
 - 군사력 증강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목표 변경 불가피
-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파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 저하
 - 러시아도 서명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관한 양해각서를 직접 파기할 경우 러시아의 국제 신뢰는 크게 저하될 전망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배치된 구소련의 핵탄두 및 ICBM 등의 발사체를 모두 폐기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영국 및 프랑스 4개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한다는 문서

라. 향후 전망

- 현재 러시아는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으며, 미국 및 서방도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현재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몰도바의 트랜스니스트르 지역도 병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러시아는 위 지역을 서방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로 활용 가능
- EU는 국가마다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러시아를 강력하게 제재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EU 및 나토 가입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 * 우크라이나라는 ‘집’ 하나를 더 짊어질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과 우크라이나의 자유가 국가 전략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 작용(Rossiskaya Gazeta, 2014.3.19)

현재 러시아는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으며, 미국 및 서방도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러시아의 협조

기대 난망.

2010년경부터

지속되어 온 러시아의

대한반도 실리외교가

또다시 정치적인

고려로 전환 가능성

- 러시아에 대한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
- 미국은 당분간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판단
- EU 국가들과는 달리 미리 간 무역량과 에너지 의존도 낮음
- 탈냉전 이후 체제에 대해 러시아가 반발하는 현상에 대해 미국이 소극적 대처를 할 경우 자국의 위상 저하 인식
-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위반한 러시아를 미국이 용인할 경우 다른 악성 국가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을 우려

5.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여파로 인해 전반적인 한러관계 악화 가능성

-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안에 관해서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으며, 당분간 한러관계 악화 가능성 농후
-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역시 실현 가능성 저하
 - 철도, 가스, 북한 지역 전력망 건설 사업 등 러시아의 절대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차질 예상
-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러시아의 협조 기대 난망
 - 2010년경부터 지속되어 온 러시아의 대한반도 실리외교가 또다시 정치적인 고려로 전환 가능성

나. 중러관계 강화

- 중국이 자국 내부의 문제로 인해 러시아의 크림 합병에 대해서는 암묵적 지지
- 중러 간 경제 및 안보협력,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감안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EU에 이어 러시아의 2번째 교역 상대국이며,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양의 원유 및 가스를 도입
-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한반도 유사시에도 작동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주변국 관계 강화 증대 필요

다. 북한 급변사태 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

- 현재 러시아는 나진항 50년간 임차, 나진-햇산 간 철도 개통 등 북한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어, 한반도 급변사태 시 자국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적극적인 군사개입 가능
 - 한반도 급변사태 해결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농후

라.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음에 유의

-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북한의 핵 폐기 관련 대북 협상에도 악영향 파급 전망
 - 핵 폐기 대신 안전보장을 담보 받았던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침공을 당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음
 - 리비아 및 이라크 사태를 보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농후
- 핵 폐기를 대가로 한 안전보장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마.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중견국가들의 자주권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

- 국제정치에서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은 중견국가의 주권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군사적·외교적 대비 철저 필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북한의 핵 폐기 관련 대북 협상에도 악영향 파급 전망. 핵 폐기를 대가로 한 안전보장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 저자 약력

■ 유명철

現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에서 근무.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모스크바 청년대학(구 품소몰 대학),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 안보, 군사, 북러관계 등을 주로 연구하였음. 최근 연구로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방안’, ‘한러 정상회담 분석’, ‘CIS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있음.

목 차

1. 기본 인식
2. 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하는가?
3. 독일·베트남 통합과정에서의 심리전 역할과 교훈
4. 북한의 대남 심리전 양상
5. 통일 대비 심리전 관련 정책 제안
 - 가. 대북 심리전 방향
 - 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1): 군사적·비군사적 조치
 - 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2): 수행 방안

통일 대비 대북 심리전

고성윤 (前 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

1. 기본 인식

-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안정을 위하여 추진되는 대북 심리전은 북한정권의 ‘체질개선’ 및 통일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심리전은 정치 및 외교, 경제, 사회, 군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필수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¹⁾ 오늘날 심리전은 주체나 대상이 군 영역을 넘어 일반에게까지 널리 확대됨.²⁾ 실제 심리전은 현대전에 있어서 독립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무력전·경제전·정치전·외교전의 영역을 공유하는 ‘작전적’ 특성을 지님³⁾
- 대북 심리전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 내재된 잠재적 욕구를 분출시켜 북한의 지도부를 압박하는 변화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본 연구는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김정은 정권의 대남 심리전 양상, 통일 대비 심리전 운용 방향과 정책대안을 주 연구내용으로 할 것임
- 대남 무력도발 시 자위권 차원의 ‘원점 타격’이란 군사적 조치는 당연한 정책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억제력 완비 및 향후 북한 태도와 연동한 ‘정권교체’ 대안 또한 대북 심리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 제기⁴⁾

2. 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하는가?

- 첫째, 북핵문제 접근, 북한 변화 유도, 통일 준비과정에서 심리전이 갖는 역할과 기능이 매우 크기 때문임
 -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은 중·단기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의

- 길로 나오도록 작용할 것이며, 남북 간 조성된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켜 상호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⁹⁾
- 대북 심리전은 북한 주민과 북한군으로 하여금 남북한의 실상과 외부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유도함으로써 의식의 변화와 이념적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충격이 각계각층과 북한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북한군의 호전성과 전의는 떨어질 것이며, 일반 주민들에게는 남한에 대한 동경과 패배의식을 조성, 지도부에 대한 이념적 동의, 맹종의 폐습이 약화되도록 작용
 - 심리전이 군사 분야는 물론 정치·외교·경제·사상전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은 주민의 의식변화, 사상개조, 정권교체, 체제급변까지도 유발하는 역할을 할 것임
 - 대북 심리전은 북한 지도층 및 주민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전략임. 데이비스(J. C. Davis) 또한 “정치적인 안정 및 불안정은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견지하는 일반적 심리상태에 달려 있다.”고 지적⁶⁾
- 둘째, ‘착각’에 빠진 동북아 국가들의 유동적 입장, 급변하고 있는 정세의 위중함에 맞서는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대북 심리전은 상황관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임
- **북한**은 일부 나아졌으나 ‘제2의 고난의 행군’ 상황(배급제 붕괴, 장마당 확산, 식량 부족, 전력난, 연료부족)으로 한류 영향 및 한중관계 심화, 5.24 조치의 지속 등으로 김정은 정권은 어려운 국면이며 단기성공도 내야 할 상황. 그런데 북한은 과거처럼 ‘핵공갈,’ 무력도발과 버티기로 한국으로부터 양보받고 러·중 간 ‘줄타기’ 외교로 실리를 확보, 일본을 활용해 한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착각(핵을 고수하는 한·중·러·일 모두 북한을 적극 지원하기에는 한계)⁷⁾
 - **중국**은 북한 비핵화 관련 국내 여론, 유엔 대북제재 동참이 불가피하나 ‘순치관계(唇齒關係)’인 북한을 임계점 이상 압박하는 데는 부담. 중국은 한국과 가까워짐으로써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일본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국에게 있어 북한이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불변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대)
 - **미국**은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으로 비핵화 관련 북한의 과거행태에 대한 학습효과를 중시, 구체적 약속 없으면 ‘6자회담’은 물론 ‘미·북 대화’도 없다는 입장. 그런데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각동맹을 기대하는 착각(한일 역사적 관계, 일본 우경화, 한중관계 고려 시 **3각동맹**은 원천적으로 불가)
 - **일본 아베 정권**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집단적 자위권 지지에 힘입어

심리전이 군사 분야는 물론 정치·외교·경제·사상전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은 주민의 의식변화, 사상개조, 정권교체, 체제급변까지도 유발하는 역할을 할 것임

**통일 대비 남북관계
개선·북한 비핵화를
위한 변화의 모멘텀은
우리 위상과 동북아
정세를 감안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담긴
정책 유연성을
바탕으로 북한에
출구를 제공, 대북한
레버리지를 강화해야
하며, 그 추진전략은
대북 심리전인 바
슬기롭고 꾸준한
추진이 절실함**

군사대국화와 보통국가화를 추구. 미국처럼 한미일 3각동맹의 틀이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미국이 일본 보통국가화를 용인하는 것은 중국전쟁이라는 정치군사적 목표 때문임), 북한카드 효용성에 대한 착각

- 한국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과 ‘드레스덴 선언’을 염두에 두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 공조,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대화의 지속을 통한 긴장 완화와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 관철, 5.24 조치 지속 등 현안 문제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한국은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 통일 대비 남북관계 개선·북한 비핵화를 위한 변화의 모멘텀은 우리 위상과 동북아 정세를 감안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담긴 정책 유연성을 바탕으로 북한에 출구를 제공, 대북한 레버리지를 강화해야 하며, 그 추진전략은 대북 심리전인 바 슬기롭고 꾸준한 추진이 절실함

3. 독일·베트남 통합과정에서의 심리전 역할과 교훈

- 독일통합과 심리전⁸⁾
 - 초기 서독의 대동독 심리전은 동독 지도자들의 경계심과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하고자 두 정부, 두 국가, 두 국민을 인정하는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
 - 첫째, 서독의 신동방정책이 강조한 심리전의 주제는 ‘접근을 통한 변화’와 ‘자결권에 의한 통일 구현’에 둬
『동방정책의 구상자인 에곤 바(Egon Bahr)는 동독 사회의 공산주의 이념을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의 종료를 핵심 주제로 선택.” 접근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점차 변화되어 나갈 대상으로 인식. 서독의 심리전 담당자들은 안정된 양독관계를 보장하면서 서독 체제의 우월성을 동독 주민에게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독일국민의 자결권에 의한 통일 구현을 전략의 주제로 삼았음』
 - 둘째, 서독 정부는 동족인 동독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동질성 회복을 주요 심리전의 주제로 선정. 서독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 주제는 ‘동독인들의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려 국민적 지지와 지원을 확보. 이를 활용하여 독일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불가피성을 여론화
 - 셋째, 외교정책 차원의 심리전 주제는 ‘윤리 및 책임성’을 강조하는 데 둬. 경제대국이지만 군사적 소국인 서독으로서는 한계성을 인식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윤리 및 책임성을 강조하였던 것임

『서독은 나치 통치시절 고통을 받았던 국가에 대하여 솔직한 사과를 하고 경제적으로 배상하는 데 정성을 쏟음. 이러한 노력과 함께 서독은 민주사회를 정착시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모범적 국가임을 내외에 알려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

○ 베트남 통합과 심리전

- 미군과 구월남 정부는 주민들에게 ‘진실된 정책’을 충분히 알려주고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기본적 욕구인 먹는 문제와 거처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소홀. 민심 이반으로 군사작전의 효율성마저도 위협을 받게 됨(심리전의 실패가 전쟁에서 패배로 연결)
- 통일 베트남 정부는 미군과 월남군의 피해를 적극 알리는 성공적인 심리전을 수행함으로써 통합 후 ‘전체 인민’의 지지하에 수복지역 행정관리 및 치안확보, 새로운 제도와 통일국가 수립에 성공함
- 공산화된 베트남의 경우 민족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명목하에 과거 월남 정권의 핵심계층에 대한 ‘제한된 숙청’을 단기간에 종결, 신속한 군사통합을 마무리해 저항세력의 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
- 통일 베트남은 통합 후 수복민은 물론 외국인들이 지닐 수 있는 생존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차단하고자 안전보장과 생활경제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통합을 위한 계획들을 신속하게 집행
- 예상과는 달리 적대국 체류자들에게도 비교적 관대한 처우로 국가 이미지를 고양, 외교적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

4. 북한의 대남 심리전 양상

○ 대남 심리전 목표 → ‘남조선 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구현

- 군사차원의 경우 대남 심리전 목표는 우리 군내부에 ‘반정부 세력’, ‘중복세력’을 배양, 군내 혼란 조성 및 한미동맹 체제를 손상시키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음. 김정일 사후에도 줄곧 한국군 기강의 붕괴를 목표로 대남 군사심리전을 강화해 왔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구현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⁹⁾
- 사회차원의 경우 북한의 대남 심리전 목표는 한국 정부 및 지도자에 대한 흑색선전과 정치 선동을 통하여 남남갈등을 확대하는 데 두고 있음. 이 또한 ‘통일전선전략’을 변함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특히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유의해야 할 것임¹⁰⁾)

**대남 심리전 목표 →
‘남조선 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구현**

**최근 북한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심화되는 한중관계를
심각하게 평가,
다층적 외교와 대남
위협·평화공세
심리전을 강화**

- 문화·체육인 교류 역시 ‘통일전선전략’ 실현을 목표로 심리전 차원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 형태
- 김정은은 장성택 등 정적 제거 및 공포정치로 권력 상층부를 장악, 적대적·도발적 대남 심리전을 전개해 3대 세습체제 안정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자평
 - 김정은 정권은 정권 승계 초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서해상에서의 잦은 도발, 핵전쟁 운운하는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체제 단속 및 남남갈등 조성을 통해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김정일 사후 야기될 수 있는 내부혼란이나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단기간에 차단하는 데 성공)
 - 2014년 2월 사격 도발 이후 7월 14일 현재까지 200발 이상의 포, 로켓, 미사일 발사로 무력 시위, 4차 핵실험 위협, 도서 상륙훈련, 비무장 지대 도발 등으로 긴장 수준을 높이고 있음
 - 북한은 6자회담에서도 한국을 배척한 채 미국과의 직접대화의 기회를 모색하거나, 한국 측으로부터 실익을 챙기면서도 우리 정부가 마치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조차도 방해하는 것처럼 선전
 - 북한의 목적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적대감과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국제적 비난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위장평화공세’로 한국 정부를 곤란에 처하도록 고도의 정치심리전을 수행 중(2000년 4월 전 단살포 중지합의 → 2012년 7월 21~25일, 1만 6,000장 대남 선전전단 발견¹¹⁾)
- 최근 북한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심화되는 한중관계를 심각하게 평가, 다층적 외교와 대남 위협·평화공세 심리전을 강화
 - 남북자(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 협의를 고리로 일본과의 대화 강화 및 경제지원 확보,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등 실리를 취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자 하나 ‘실속’은 없어 보임¹²⁾
 - 2014년 1월 16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중대제안’에 이어 6월 30일 ‘특별제안’을 통해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증상하는 모든 행위,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 급기야 7월 10일 인천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과 ‘미녀’ 응원단을 보내기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하는 등 파상적인 대남 유화 심리전과 7월 14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100여 발의 방사포·해안포 발사와 같은 강도 높은 무력시위로 ‘화전양면(和戰兩面)’의 심리전을 펴고 있음(무력충돌 회피, 확전예방 차원에서 북이 탄착지 고려한 것은 유의미함)

5. 통일 대비 심리전 관련 정책 제안

가. 대북 심리전 방향

-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에 유의
 - 외형상 안정되어 보이나 혼란스러운 정도의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볼 때 체제 내부는 불안정한 상태로 판단됨
- 대북 심리전의 기본 방향
 - 중·단기적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연착륙(soft landing)’시켜 혼란을 최소화하여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남북통합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음
 - 향후 대북 심리전은 구서독처럼 ‘접촉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를 목표로 삼아 공식·비공식 접촉기회의 확대, 지도층 및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범정부·범국가·세계사적 과제¹³⁾
 - 심리전의 핵심 내용은 북한 주민은 물론 여론 주도층(지도층 중심)의 대남 적개심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핵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관계개선이 불가능한 것 또한 확신시켜야 함
- 북한 지도부가 ‘확실한 인식’을 갖게 할 수준의 억지력 보장과 정치적 의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심리전 추진 원칙은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균형성·일관성에 기반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비협력-협력이 동반됨을 주지토록 해야 할 것임
- 향후 북한은 경제실리를 챙기겠다는 ‘단기적·기만전술적 거래’가 아닌 핵포기 등 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함.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서북도서, 전후방 지역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적 행위와 관련하여 진정성 있는 선행 조치와 우리의 사할적 이익인 핵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보일 경우, 이를 남북한 신뢰구축 및 평화공존의 모멘텀으로 삼을 수도 있으며 ‘북한경제 살리기의 통큰 지원’도 가능할 것임

**북한 지도부가
‘확실한 인식’을
갖게 할 수준의 억지력
보장과 정치적 의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심리전
추진 원칙은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균형성·일관성에
기반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비협력-협력이
동반됨을 주지토록
해야 할 것임**

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1): 군사적·비군사적 조치

- 확실한 보복을 담보할 전력 구비 및 사회적 합의 기반 강화
 - ‘맞춤형 억제전략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미국의 의지 명문화
 - 최근 북한이 핵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은 핵을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한미연합전력에
기반한 ‘확실 인지’
수준의 보복전력이
있어야 심리전
실효성이 배가될
것임. 적(敵)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예방할 수 있는 억제력
구비는 방위의
선결조건이자
심리전에서 우위를
보장하는 자산임.
북한이 아무리 비대칭
전력을 건설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쇄되고
‘정권붕괴’로
연계될 수 있음을
심리전 메시지에 포함**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대두

• 4 Grim Scenarios

* 근거: K. Lieber(Georgetown U.), D. Press(Dartmouth College) 교수의
“Conventional War and Nuclear Escalation” 발제문(2014.6.10, KIDA
회의실)

• 북한이 핵 사용 시 딜레마 상황이 예견되더라도 반드시 응징한다는
원칙을 명문화 할 필요(북한 태도를 보아 신(新)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착수, “New Guideline” 필요성 정책적 검토를 제안)

1. <u>Accept cease fire</u> • Halt operations	• Sets dangerous precedent • Encourages proliferation by adversaries and allies
2. <u>Punitive Nuclear Response</u> • Target NK leadership • March on Pyongyang • Missile defense	• Targets may be located in major population center • <u>Risks several more nuclear hits on allied territory</u>
3. <u>Continue campaign</u> • March on Pyongyang • Missile defense	• <u>Risks several more nuclear hits on allied territory</u> • Permanent damage to global alliance network
4. <u>Nuke / conv counterforce</u> • March on Pyongyang • Missile defense	• May not destroy them all • If U.S. strike nuclear – kill many noncombatants

• 군사적 조치로 태평양사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의 지속적인 폭격기
유지정책(Continuous Bomber Presence: CBP) 및 핵투발 능력을 갖춘
제7함대 잠수함 전력의 한반도 인근순시(Patrol) 명문화(MCM 의제화)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orea Air Missile Defense: KAMD) 구축 및 주한
미군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운용

• KAMD 조기 구축 및 주한미군 THAAD 배치 허용으로 북핵 및 미
사일 위협 상쇄

• 중국을 향해서는 중국의 북핵 책임론, THAAD가 방어위주의 무기임
을 강조, AN-TPY-2 레이더의 중국 군사력 감시효과는 레이더 가동
에 따른 부수적 사안임을 강조

- 킬 체인(Kill Chain) 조기 구축

• Kill Chain 전력은 선제공격에 사용될 수도 있는 전력이므로 주변국
설득도 병행. 기술적 수준 및 효과성, 비용 등 문제가 거론되나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력

○ 한미연합전력에 기반한 ‘확실 인지’ 수준의 보복전력이 있어야 심리전
실효성이 배가될 것임. 적(敵)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예방할 수 있는 억

제력 구비는 방위의 선결조건이자 심리전에서 우위를 보장하는 자산임. 북한이 아무리 비대칭 전력을 건설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쇄되고 ‘정권붕괴’로 연계될 수 있음을 심리전 메시지에 포함¹⁴⁾

-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감대 조성으로 남남갈등의 틈새 최소화
 - 통일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장?
 - 통일 부담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고통을 감내할 물질적·정신적 준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 어떤 유형의 통일을 목표로 할 것인가?
 - 북한 스스로의 체제급변 외 인위적 급변사태를 유도할 것인가?
 - 대주변국 정치외교 심리전
 - 현 대북제재, 통일대박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의 관계 정리
- 내부적으로 통일 염원을 확산하고 통일비용 등 고통을 분담할 각오를 해야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통일의 모습(de facto unification → 완전 통일)으로 접근할 수 있음. 인위적 급변사태 유도는 위험하며 북한의 자연적 급변상황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임. 전략적 소통 차원의 정치외교 심리전 수행으로 주변국들을 지지세력화가 급선무(미국의 북한 진입문제, 중국의 ‘개런티’, 일본의 동의가 중요)¹⁵⁾

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2): 수행 방안

- 심리전은 ‘솔직한 정보’를 담고 ‘끈질긴’ 수행 필요
 - 가능한 수단을 동원(방송, 세미나, 기자 회견, 발간물, 사이버 공간 등) 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솔직한 정보를 일관되게 전파
 - 북한 당국자들에게는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과’를 넘어 비핵화와 연계, 반대급부가 없는 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천명(‘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한 협력에는 분명한 한계, 진정성은 핵문제 관련 전향적 입장이 전제되어야 함을 전파)
 - 과거처럼 버티든가, 도발 강도를 높이면 굴복·양보·챙겨주는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야 함(5.24 조치가 현 정부 말기까지도 간다는 우리 자신의 각오도 필요)
 - 한국을 전쟁 도발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북한 주민의 분위기를 활용,¹⁶⁾ 이는 해외정보 유입 및 한류문화 동경의 결과로 대남적개심 약화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됨
- 특사파견 → 정상회담안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할 시점

심리전은 ‘솔직한 정보’를 담고 ‘끈질긴’ 수행 필요

결론적으로**김정은 정권이 핵을****포기 안 하고 도발을****중단하지 않을 경우****동북아 안정을 위하여****‘레짐 체인지’도****국제공조를 통해****추진할 수 있음을****심리전 메시지에****담아야 할 것임**

- 북한 당국의 변화가 없는 한 국제사회 제재 지속, 5.24 조치의 유지
 - 장기간 경색된 남북관계 탈피를 위해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제안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함
 - 회담 대비 보수층 반발 및 원칙의 훼손을 감내할 정도로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한지 정책적 검토는 필요(필자는 현 여건하 해제 반대쪽임)
 - 장기화된 현 경색국면 돌파를 위해 특사교환 및 정상회담의 적기라고 판단
 - 북한이 선호하는 ‘특사교환’ 방식에 대한 검토를 제안함
- 김정은 정권은 내부적 안정을 위해 외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이므로 명분과 실리가 보장되면 문호를 점차 개방할 것임. 현재 북한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인은 물론 자강도를 제외한 8도 지역 관광특구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김정은으로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줄 가시적 선물을 만들 필요가 있음. 외국 기업, 외국 관광객보다 남한 기업·남한 관광객을 선호하는 북한을 활용¹⁷⁾
 - 대남 적개심 완화하도록 접근
 - 과거 서독 정부의 심리전은 독일 통일에 대하여 동독 주민과 주변국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없애고 그들을 지원세력으로 만드는 데 진력하였음을 명심¹⁸⁾
 - 다양한 채널과 기회를 통해 ‘보복없는 통일 한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도록 전략적 소통 및 선전홍보전 강화
 -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있는 한국은 병영국가인 북한과 달리 인권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후 동족인 북한 주민을 포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합의된 사항이며 공식적인 정책임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함
 - 구서독이 ‘무리한 통일정책’을 접어두고 동족인 동독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핵심 심리전의 정책으로 선정한 것처럼 민족동질성 회복에 집중
 - “5.24 제재조치와 인도적 지원을 밀접히 연계할 필요가 없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국민정서를 감안, 상황별 대응은 필요하되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제안
 - 결론적(結論的)으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 안 하고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동북아(東北亞) 안정을 위하여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도 국제공조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음을 심리전 메시지에 담아야 할 것임. 한편, 북한 및 주변국을 향해 급변사태 발생 등 유리한 상황 도래 시라도 이를 기회로 삼아 북한을 강점하거나 흡수통일하지 않을 것이

라는 통일정책을 이해시키는 정치·외교 심리전 또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북한 핵은 체제 생존용이 아니라 고립과 악순환의 뿌리이자 김정은 정권 패망의 고리임을 ‘당근과 채찍’으로 설득, 전파해 나가야 할 것임.¹⁹⁾ 나아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후방기지 기능 및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인 일본과의 냉각기가 장기화되는 것은 냉정히 경계할 필요가 있음

주석

- 1) 역사적 사례들은 심리전이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 수단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1972년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행된 닉슨의 ‘중공’ 방문을 통한 외교관계 개선, 구소련 후르시초프 집권기 제3세계에 대한 곡물원조 및 경제지원, 최근 북한의 미녀 응원단 파견 등 ‘위장평화공세’와 미군 유해 송환, 일본인 납북자 관련 북일 간 대화, 시진핑 주석의 북한에 앞선 방한 외교, 일본 아베총리의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 활용 제한 등이 좋은 예이다.
- 2) 이광현, 「현대사회와 심리전략」(서울: 화일, 1993), p.42; 심진섭, 「심리전 이론과 실제」(서울: 학지사, 2012).
- 3) 김종열, 「정보의 역할」(서울: 우문사, 1970), p.130; 전개서 심진섭(2012); 조영갑, 「국방심리전략과 리더십」(서울: 북코리아, 2006), pp.25, 35-36.
- 4) 2014년 6월 30일 한민구 신임 국방장관은 원점타격은 합참의장 재직 시 원칙을 정립했음을 강조하고 이를 자위권 차원에서 유지할 것임을 천명하였다(연합뉴스 속보, 2014.6.30); 2010년 12월 합참의장 재직 시 장관은 “현장지휘관의 자위권적 재량으로 위협근원 제거”를 단호히 강조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0.12.9).
- 5) R. D. McLaurin, “Psychological Operations and National Security,” in Ron D. McLaurin (ed.), *Military Propaganda: Psychological Warfare and Operation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2), pp.1-3. McLaurin은 그의 글에서 국제관계에서 심리전은 상대국의 인식, 태도, 견해 및 행태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유발한다고 보았으며 그것은 모든 수준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보았다.
- 6) James C. Davis,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7, 1962.
- 7) KRIS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14-05(No.208), “김정은 체제의 핵 및 대남 정책 노선 진단”(서울: KRIS, 2014.4.14).
- 8) 독일 통합과정에서의 심리전의 역할은 다음 자료에서 다루어 졌다. 김학성, 「서독의 분단질서 관리 외교정책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서병철, 「공산권 붕괴와 독일 통일」(서울: 계축문화사, 1991); 이영기, 「독일통일의 해부」(서울: 국제언론문화사, 1990); 육군본부, 「두개의 군과 하나의 조국」(계통대: 육군본부, 1994); 이광현, 「현대사회와 심리전략」(서울: 도서출판 파일, 1993);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 방안」(서울: 팔복원, 1996).

- 9)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550. 김일성은 본 논문에서 동구사회주의권의 경제난에 따른 체제 기반의 약화 및 정책변화 노선에 영향을 받아 '80년대 중반 이후 과거 노동계급 주도의 통일전선보다는 포괄적인 '민족통일전선'의 구축을 역설한 바 있다. 김동성,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전술과 대남 정치심리전,” 「전략연구」통권 57집(서울: KRIS, 2013.3), pp.309-349.
- 10) 이상호, “북한 사이버 심리전의 실체와 대응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집 1호(2011.8), pp.263-290.
- 11) 연합뉴스(2012.7.26) 보도 참조.
- 12) 송화섭, “북·일 합의의 의미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서울: KRIS, 2014.7), pp.20-22.
- 13) 최근 북한 주민의 대남의식 조사는 전쟁 도발국가로 한국을 꼽는 숫자가 매우 적음을 밝히고 있어 심리전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화되도록 해야 함(조선일보, 2014.7.9). 2013년 KIDA 연구진이 전체 탈북자 조사, 군출신·일반주민 구분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 도출.
- 14) 이명철, “북한의 긍정적 변화 유도를 위한 우리의 전략,” 「동북아안보정세분석」(서울: KIDA Press, 2012.3).
- 15) 남성욱, “예상가능한 통일 시나리오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KIDA 정책포럼에서 발제된 모노그래프(2014.7.15) 및 토론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재작성함.
- 16) 정상돈, “전쟁 가능성과 도발국가에 대한 북한의 인식,” 「동북아안보정세분석」(서울: KIDA Press, 2013.11).
- 17) 김석진,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실태와 전망”(KRIS: 서울, 2014.7), pp. 26-28). 북한 경제는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최빈국 수준인 바 김정은은 문제해결을 위해 개선책(확실치는 않으나 ‘포전담당제’ 등)을 내놓고 있어 제한적이거나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18) 김세연, “한반도 통일시 위기 관리 방안 연구,” '97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통일정책환경(I)』(서울: 통일원, 1997), p.96.
- 19) 서울신문(2014.8.1), “미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 압박·제재기조 변함없다” 보도 참조. 글린 데이비스 미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가 아닌 인내내정책이며, 국제적 공조로 북한의 불법행위에 따른 비용은 높이고 무기수출은 원천봉쇄하여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함.

❖ 저자 약력

■ 고성운

現 한국국방연구원(KIDA) 명예연구위원, 국방부/해군 자문위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992년 5월 미국 Univ.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199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대외협력실장, 군사전략실장, 군사기획센터장, 국방현안연구위원장(부원장 대우)을 역임함. 주요 연구분야는 남북한 관계/한미관계/군사력 평가 및 전력건설/PKO 등 안보 및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수십 편의 핵심 연구과제를 수행. 주요 저서로는 단행본 *Rediscovering Asia*(2010), 『대한민국 세계로 나아가는 길(2011)』, 『거목일마(2013)』 등이 있으며, 연구보고서로 「국방현안과 대책(2012)」 외 60여 편, 번역 및 분석보고서 책임공저로 「QDR 2010: KIDA의 분석과 QDR 요약(2010)」, 「NPR 2010: KIDA의 분석과 NPR 요약(2010)」 등이 있음. 연구원 재직 시 백여 회 이상의 국내외 인터뷰 및 방송해설 안보전문가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2013년 이후 현재까지 50여 편의 안보칼럼을 메이저 중앙일간지에 기고, 오피니온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대표 포상으로 국가안 전보장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2013년 10월 1일 수훈.

JPI정책포럼 현황

- 니우린제(牛林杰) · 윤태룡 · 장준영 · 이성우 『중국과 아시아의 평화협력』
(No.2014-13/14/15)
- 조태열 · 진행남 · 정재욱 · 이성우 『신뢰외교 구축과 안보협력의 미래』
(No.2014-09/10/11)
- 김태환 · 이신화 · 신법식 · 장노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No.2014-06/07/08)
- 이성우 · 이상현 · 전재성 · 진행남 『외교안보 전략의 새로운 방향』
(No.2014-03/04/05)
- 하인즈 가트너 · 서동주 · 허태회 『신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와 미러관계:
특징과 전망』 (No.2014-01/02)
- 배궁찬 · 경제희 · 이정우 『한 · 중 · 일 협력의 과제와 전망』
(No. 2013-17/18/19)
- 신각수 · 김성한 · 서창록 · 조정현 · 신부남 『한국외교의 방향과 현안』
(No. 2013-13/14/15)
- 조양현 · 신정화 · 고봉준 『일본과 동북아 안보』 (No. 2013-9/16)
- 주철기 · 진행남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No. 2013-11)
- 유현석 · 이성우 · 김성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
(No. 2013-10/12)
- 진행남 · 한인택 · 황일도 『북핵과 한반도 평화』 (No. 2013-06/07/08)
- 제성훈 『3기 푸틴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결정요인, 평가, 전망』
(No. 2013-05)
- 이춘복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No. 2013-04)

The Ukraine Crisis: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 It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YU Young Chul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The tension between the West and Russia has been heightened since Russia's decision to incorporate Crimea into its territory. At the time of the outbreak of the Euromaidan Revolution in December 2013, few people expected that the situation in Ukraine would escalate to such an extent that it would shake the international order established in the post-Cold War period. The situation has emerged as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issue of the 21st century to date. Russia's decision to annex Crimea has also had an impact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East Ukraine, which is strongly pro-Russian. Thus, it appears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Western countries and Russia will deepen further. Currently, Russia is maintaining a very aggressive stance about Ukraine, but it is not realistically easy for Russia to push for everything it wants on its own terms. Russia can hardly afford to exercise brinkmanship in its confrontation with the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n the Ukrainian crisis. Accordingly, we in this country need to be ready for contingencies, while keeping a close watch on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n the Desirable Direction of Psychological Warfare with the North in Preparation for National Unification

KO Sung Youn (Ho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Many South Koreans hop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would take a turn for the better following the death of Kim Jong-il, the leader of North Korea. However, the North has continually resorted to bellicose provocations and harsh threatening rhetoric as part of its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the South in 2014. On July 14, 2014, for example, the North's coastal guns and multiple rocket launchers (MRLs) fired over 200 shells on open seas; and even a few short-range missiles were launched. One thing that naturally did not escape our attention is that these acts of belligerence continued for a few days, gradually moving closer to the DMZ.

The purpose of these provocations by the North seems clear: it intends to occupy an advantageous position in its psychological warfare with the South by showing off its capability to destroy targets in the South at any time. The current spate of provocative acts by the North also seems to be linked to its internal situation. Kim Jong-un's leadership may have secured some stability with the removal of Jang Sung-taek, but the overall atmosphere remains volatile. Moreover, Kim Jong-un must feel irritated abou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South Korea, which points to ever-closer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 bid to avoid total isolation, the North has attempted to make friendly overtures toward Japan and Russia, although what it can obtain from them remains questionable. The current situation appears to have compelled the North to make provocations and show off its nuclear capability.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South needs to continue pushing for non-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striving to foster conditions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is paper deals with the major strategies that the South should adopt in its psychological warfare with the North based on the said needs, including dealing with the North's regime stably and avoiding any collisions in the short- and mid-term perspectives, assisting it in making a gentle transition within the framework of a peaceful and strategic unification process, and trying to establish conditions that are conducive to gradual and peacefu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through an intensification of its psychological warfare with the North.

To conclude, this paper analyzed military measures aimed at enhancing the efficacy of psychological warfare and policy alternatives available in non-military areas. It also stresses the need to deliver the message that the South may, under the umbrella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ush for regime change in the North to ensure stability in the region if the North's regime is unwilling to renounce nuclear weapons and end its provocations.

Reconfigur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and Strategic Choices

3 Significance of the Situation in Ukraine from an International Political Perspective
SUH Dong-Joo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Ukraine Crisis:
7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 It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YU Young Chul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18 On the Desirable Direction of Psychological Warfare with
the North in Preparation for National Unification
KO Sung Youn (Ho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